

국 제 법

문 1. 국제법의 법전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법의 법전화는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국제연맹체제에서도 국제법의 법전화가 시도되었다.
- ③ 유엔헌장상 국제법의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은 총회의 임무에 속한다.
- ④ 국가들이 현행 국제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엔국제법위원회(ILC)의 작업에 의존하는데 1982년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(UN)협약」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.
- ⑤ 1961년 「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」과 1963년 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」의 대부분의 규정은 기존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이다.

문 2. 국제법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로부터 국제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다.
- ② 국제노동기구(ILO)는 국제법 주체성을 갖는다.
- ③ 반란단체가 제한적으로나마 국제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반란이 발생한 국가의 일정지역을 실효적으로 점거하여야 한다.
- ④ 교황청은 조약체결권을 가지며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.
- ⑤ 팔레스타인은 유엔총회에서 상주옵저버국으로서 표결권을 갖는다.

문 3.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신생국은 다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조약의 타당사국들로부터 국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.
- ② 신생국이 타국과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는 경우 그 국가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③ 국가승인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.
- ④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상호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⑤ 정식 외교관계가 개설되지 않은 국가간에도 국가승인이 가능하다.

문 4. 국가간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내문제란 한 국가의 영토 상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한다.
- ② 권고나 제의는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국내문제의 범위는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.
- ④ 국내문제 불간섭은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이다.
- ⑤ 국내문제 불간섭은 강행규범적 의무는 아니다.

문 5.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기관이 직무상으로 취한 상업적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.
- ② 어느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
- ③ 국제사법재판소(ICJ)는 1986년 니카라과사건에서 미국이 콘트라반군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 상황만으로는 콘트라반군의 행위를 미국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.
- ④ 공적 기관의 부재 또는 마비로 인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의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- ⑤ 국가는 그 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.

문 6.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개별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나 집단적 자위권은 그렇지 않다.
- ② 유엔헌장은 무력공격 또는 그 급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자위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.
- ③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허용된다.
- ④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(necessity)은 요구되나, 비례성(proportionality)은 요구되지 않는다.
- ⑤ 자위의 조치는 국가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속하지 않는다.

문 7. 1961년 「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」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교관의 개인 주거공간은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을 향유한다.
- ② 접수국은 외교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한다.
- ④ 외교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,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.
- ⑤ 접수국은 파견국의 동의 없이 파견국의 공관부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.

문 8.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이중국적자가 제3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두 국적국 중 어느 국가도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ㄴ. 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ㄷ. 원칙적으로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그 국가의 국내법상의 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ㄹ. 무국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.
- ㅁ.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국적은 피해의 발생시부터 국제청구에 의한 해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.

- ① ㄱ, ㄴ, ㄷ ② ㄱ, ㄷ, ㅁ ③ ㄴ, ㄷ, ㄹ
- ④ ㄴ, ㄹ, ㅁ ⑤ ㄷ, ㄹ, ㅁ

문 9.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통국제법에서는 오직 국가만을 국제법의 주체로 보았을 뿐,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다.
- ②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.
- ③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국제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들어와 국제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였다.

문 10. 1951년 「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」과 2006년 유엔국제법위원회(ILC) 「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」상 난민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는 자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,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없다.
- ② 국가는 불법입국한 난민에게 불법입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그 불법입국만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.
- ③ 난민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에서만 추방될 수 있다.
- ④ 난민은 그가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- ⑤ 국가들은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문 11. 1969년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」상 조약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, 당사국은 그 조약의 종료를 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자신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조약의 종료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.
- ③ 양자조약의 한 당사국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, 타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사유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.
- ④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.
- ⑤ 조약 당사국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양국간의 모든 조약은 종료한다.

문 12. 1969년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」상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환문서 또는 교환서한과 같은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도 동의표시가 될 수 있다.
- ② 서명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약에서 규정하는 경우, 서명만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.
- ③ 비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락 또는 승인에 의해서도 동의가 표시될 수 있다.

- ④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.
- ⑤ 국가대표가 추후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,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는 비준에 의하여 표시된다.

문 13.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.
- ②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, 당사국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③ 유엔총회의 권고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.
- ⑤ 어떠한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문 14. 1982년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(UN)협약」상 대륙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기 위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.
- ②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③ 연안국은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.
- ④ 모든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대륙붕에 해저 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격을 갖는다.
- ⑤ 연안국은 대륙붕에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.

문 15. 1982년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(UN)협약」상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?

- ①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
- ② 항공기의 선상 발진·착륙 또는 탑재
- ③ 국기를 게양한 잠수함의 해면 위 통항
- ④ 어로활동
- ⑤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

문 16.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도표화한 것이다.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분 류		해결수단
분쟁당사자간 해결		교섭 · (A)
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	정치적 해결	주선 · (B) · 심사 · 조정
	법적 해결	(C) · 사법재판

- | | | | |
|---|-----|-----|----|
| | A | B | C |
| ① | 협의를 | 중개 | 중재 |
| ② | 패널 | 중재 | 중개 |
| ③ | 중개 | 협의를 | 패널 |
| ④ | 패널 | 중개 | 중재 |
| ⑤ | 협의를 | 중재 | 중개 |

문 24. 세계무역기구(WTO) 설립협정 및 그 부속서에 부합하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음에 언급되는 국가들은 모두 WTO 회원국임)

- ㄱ. A국의 甲기업은 B국에 자사 상품을 수출하던 중, B국이 수량제한조치를 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. 이에 甲기업은 B국을 WTO에 직접 제소하여 승소하였다.
- ㄴ. C국은 GATT 제24조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D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여 D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E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였다. 이에 E국은 C국이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.
- ㄷ. F국은 서면에 의한 탈퇴통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에 G국에 대해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.
- ㄹ. H국은 I국이 자국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응하여 제재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하였다.
- ㅁ. J국은 K국의 행위가 반덤핑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국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국을 WTO에 제소하였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ㄹ
- ④ ㄴ, ㅁ
- ⑤ ㄷ, ㅁ

문 25. 「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」상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국내조치가 자국상품을 보호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된다.
- ② 내국민대우원칙은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
- ③ 관세부과 등의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.
- ④ 수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국내상품간 최소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과세율의 미소한 차이는 허용된다.
- ⑤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제품의 혼합·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국내수량규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

노동법

문 1.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근로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근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.
- ②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③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.

문 2. 「근로기준법」상 기본원칙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(性)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, 국적·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.
-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문 3.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,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.
- ③ 노동조합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로 족하다.
- ④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.
-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문언상 명백하다면,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.